SBS 신년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2009. 12 】

목 차

【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1
2. 응답자 특성 2

【 조사 결과 】

1. 국정지지도 3
2. 정당지지도 5
3.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복수 응답) 7
4. 새해 필요한 친서민 정책 강화 분야 9
5.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반 10
5-1. 세종시 수정 추진시 기대효과(n=수정안 찬성 526 명) 12
5-2. 세종시 수정 추진시 우려되는 점(n=수정안 반대 365 명) 13
6. 4 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 평가 14
6-1. 4 대강 살리기 기대효과 (n=사업 추진 384 명) 16
6-2. 4 대강 살리기 추진시 우려되는 점(n=사업 재검토 552 명) 17
7. 선호하는 외고 개편 방안 18
8.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 평가 19
9. 지지하는 차기 대선 후보 20
10. 소득 3 만 달러 달성 위한 경제 정책 변화 방향(복수응답) 21
11. 경제발전 최대 위협요인(복수응답) 22
12. 일류국가 구현 위한 사회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23
13.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최우선 대책 24
14. 일류국가 구현 위한 국가적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25
15. 일류국가 구현 위한 정치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26
16. 일류국가 구현 위한 외교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27

▣ 별 첨 1. 통 계 편
▣ 별 첨 2. 설 문 지

Ⅰ. 조 사 설 계

【1】 조 사 방 법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2】 표 본 설 계

모 집 단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표 본 크 기	1,000 명
표 본 추 출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오 차 한 계	± 3.1%p (95% 신뢰수준)

【3】 조 사 진 행

조 사 기 간	2009 년 12 월 30 일(수) ~ 31 일(목)
조 사 기 관	TNS Korea

Ⅱ. 응 답 자 특 성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
▣ 전 체 ▣	1,000	100.0
▣ 지 역 별 ▣		
서 울	212	21.2
인 천 / 경 기	276	27.6
대 전 / 충 남 / 충 북	97	9.7
광 주 / 전 남 / 전 북	105	10.5
대 구 / 경 북	106	10.6
부 산 / 울 산 / 경 남	162	16.2
강 원 / 제 주	42	4.2
▣ 성 별 ▣		
남 자	492	49.2
여 자	508	50.8
▣ 연 령 별 ▣		
1 9 - 29 세	207	20.7
3 0 대	218	21.8
4 0 대	226	22.6
5 0 대	160	16.0
6 0 대 이 상	189	18.9
▣ 직 업 별 ▣		
농 업 / 임 업 / 어 업	50	5.0
자 영 업	183	18.3
블 루 칼 라	69	6.9
화 이 트 칼 라	220	22.1
가 정 주 부	279	27.9
학 생	111	11.1
기 타 / 무 직	87	8.7
▣ 소 득 수 준 별 ▣		
1 0 0 만 원 이 하	127	14.3
1 0 1 ~ 2 0 0 만 원	174	19.5
2 0 1 ~ 3 0 0 만 원	213	23.9
3 0 1 ~ 4 0 0 만 원	158	17.7
4 0 1 만 원 이 상	219	24.6

1. 국정지지도

국정지지도, '잘하고 있다' 49.8%		
질 문 ▸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14.7%	*잘함: 49.8%*
다소 잘하고 있다	35.1%	
다소 잘못하고 있다	27.6%	*못함: 43.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5%	
모름/무응답	7.1%	-
합 계	100.0%	-

○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9.8%로 '잘못하고 있다(43.1%)'는 부정평가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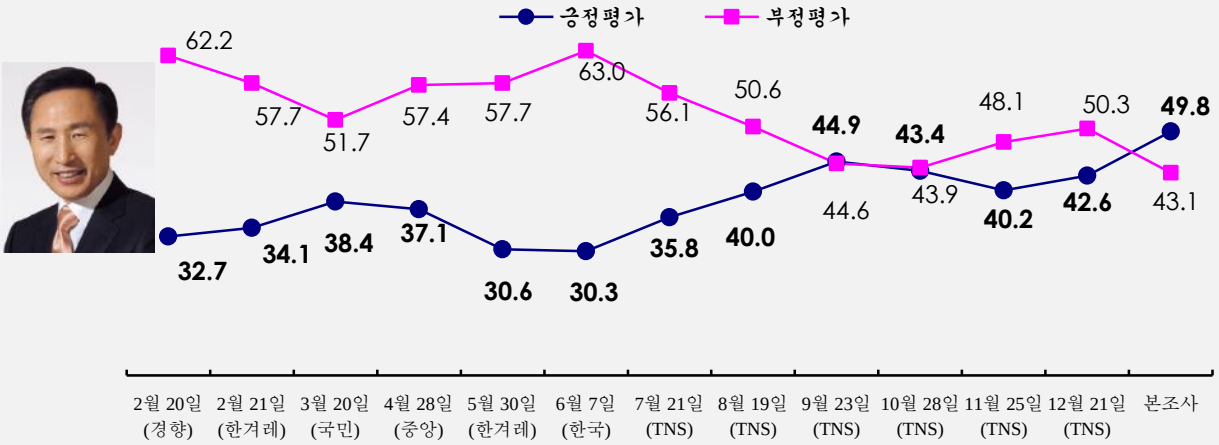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잘함	못함			잘함	못함
전체		**49.8**	**43.1**	전체		**49.8**	**43.1**
지역별	서울	50.8	45.2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56.3**	31.9
	인천/경기	52.2	44.1		자영업	51.4	46.4
	대전/충남/충북	48.8	43.6		블루칼라	**54.9**	34.5
	광주/전남/전북	37.2	**53.7**		화이트칼라	37.1	**55.1**
	대구/경북	**63.1**	23.6		가정주부	**55.9**	35.0
	부산/울산/경남	43.4	44.5		학생	42.2	**49.4**
	강원/제주	55.0	40.2		무직/기타	**62.9**	34.9
연령별	19-29세	39.0	**53.3**	소득별	100만원 이하	**70.6**	22.8
	30대	36.2	**58.3**		101-200만원	51.8	40.5
	40대	44.1	**50.4**		201-300만원	46.2	45.5
	50대	**61.2**	29.5		301-400만원	40.2	**52.3**
	60대이상	**74.8**	17.0		401만원 이상	48.8	**48.6**

○ '잘하고 있다'는 ▶대구/경북(63.1%) ▶50대(61.2%), 60대이상(74.8%) ▶농림/어업(56.3%), 블루칼라(54.9%), 주부(55.9%) ▶100만원이하 소득층(70.6%) ▶중졸이하(67.1%), 고졸(54.5%) ▶한나라당 지지층(82.0%)에서 특히 높았음.

○ '잘못하고 있다'는 ▶광주/전라(53.7%) ▶20대(53.3%), 30대(58.3%), 40대(50.4%) ▶중소도시(47.4%) ▶자영업(46.4%), 화이트칼라(55.1%), 학생(49.4%) ▶301-400만원 소득층(52.3%), 401만원이상 소득층(48.6%) ▶대재이상(51.1%) ▶민주당 지지층(6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TNS Korea DataBase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 2009년 1년간의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출발한 지지도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저점을 기록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

○ 하반기 들어 8월 중순 시점에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 천명 이후, 친서민 정책의 발표, 경제지표 회복, G20 정상회의 유치 등을 계기로 국정 지지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을 띠게 됨.

○ 11월 들어,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등이 사회 정치적 갈등을 생산하면서 잠지 주춤한 이후, 지난 27일 UAE 원전수주로 대통령의 비즈니스 외교 성과가 부각되면서 지지도가 급등하여 49.8%를 기록하며 올해를 마감함.

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5.4 % vs. ‘민주당’ 21.2%								
질 문 ▸	○○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 하십니까?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친박연대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국민 참여당	지지정당 없음
35.4%	21.2%	2.2%	2.7%	4.2%	0.7%	2.3%	1.4%	29.9%

○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이 21.2%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4.2%)’, ‘친박연대(2.7%)’, ‘진보신당(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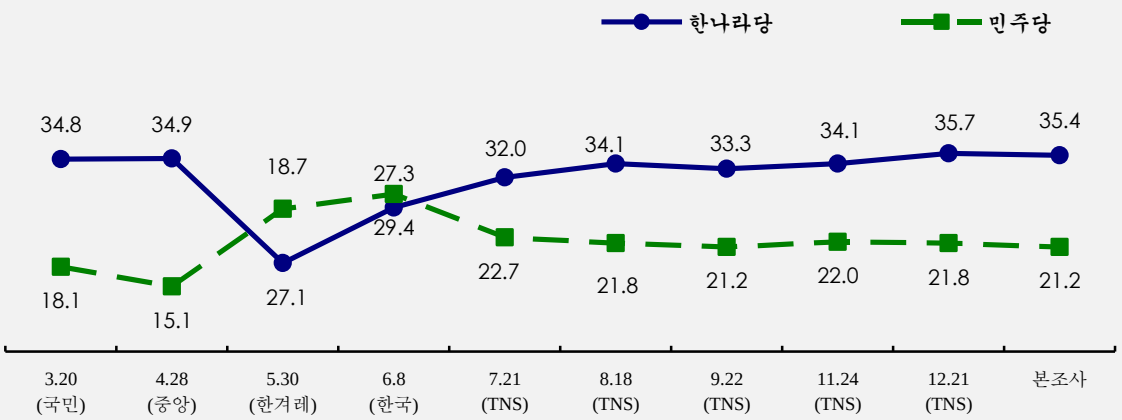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정당지지도 분석(%) 】

		한나라당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전체		**35.4**	**21.2**	전체		**35.4**	**21.2**
지역별	서울	33.1	21.0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40.1**	23.8
	인천/경기	37.8	20.9		자영업	**40.1**	19.2
	대전/충남/충북	29.6	22.4		블루칼라	33.9	17.9
	광주/전남/전북	14.6	**44.5**		화이트칼라	21.8	**26.1**
	대구/경북	**52.4**	8.8		가정주부	38.5	18.5
	부산/울산/경남	36.9	15.7		학생	32.4	**25.4**
	강원/제주	**47.1**	15.7		무직/기타	**53.0**	17.9
연령별	19-29세	30.7	**25.2**	소득별	100만원 이하	**50.3**	18.5
	30대	19.6	**26.9**		101-200만원	30.9	22.6
	40대	25.8	24.2		201-300만원	33.0	22.8
	50대	**49.5**	13.3		301-400만원	24.8	31.5
	60대이상	**58.2**	13.2		401만원 이상	**39.7**	17.9

○ ‘한나라당’은 ▶대구/경북(52.4%) ▶50대(49.5%), 60대이상(58.2%) ▶자영업(40.1%) ▶100만원이하 소득층(50.3%), 401만원이상 소득층(39.7%) ▶중졸이하(47.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8.2%)에서 특히 높았음.

○ ‘민주당’은 ▶광주/전라(44.5%) ▶20대(25.2%) ▶읍면지역(25.1%) ▶학생(25.4%) ▶301-400만원 소득층(31.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TNS Korea Database – 정당 지지도 추이(%)



○ 2009년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올해 5월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시점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등하면서, 양당 지지도가 역전되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30% 중반대, 민주당 지지층이 20%내외에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형 이슈가 없다면 새해에도 한나라당 지지도 우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복수 응답)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 '경제살리기' 71.8%	
질 문 ▸	새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2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 살리기	71.8%
사회 양극화 해소	35.7%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개혁	31.4%
세종시 논란 등 국론분열 해소	29.7%
북핵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	13.5%
개헌 등 정치개혁	12.3%
기타	0.6%

○ 새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10 명 중 7 명(71.8%)이 '경제 살리기'를 꼽아 단연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35.7%)', '교육개혁(31.4%)', '국론분열 해소(29.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경제 살리기'를 꼽은 응답은 ▶50 대(84.1%), 60 대이상(82.5%) ▶ 주부(80.7%) ▶100 만원이하 소득층(86.2%) ▶중졸이하(91.3%)에서 특히 높았음.

○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은 ▶인천/경기(41.0%) ▶남자(40.5%) ▶20 대(44.2%) ▶화이트칼라(45.1%) ▶대재이상(44.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 개혁'은 ▶여자(37.6%) ▶30 대(41.1%) ▶201-300 만원 소득층(35.7%), 301-400 만원 소득층(3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론분열 해소'라는 응답은 ▶서울(34.9%), 대전/충청(45.0%)▶401 만원이상 소득층(36.2%) ▶민주당 지지층(3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TNS Korea Database 취임 직전 여론조사 (대통령 기대 분야)

※ 복수응답	경제성장	빈부격차 완화	지역 균형발전	교육개혁	정치개혁	외교안보 강화	법질서 확립
2008.2.18 SBS-TNS	68.3%	34.6%	25.8%	21.0%	16.7%	13.3%	11.0%

○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기대 분야로 '경제 성장(68.3%)'을 꼽은 응답이 단연 높았으며, '빈부 격차 완화(34.6%)'와 '지역 균형발전(25.8%)' 등 사회 양극화 해소 관련 응답을 꼽은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음.

○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본 조사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꼽는 응답이 단연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주문하는 응답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경제와 민생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전반기를 관통하는 핵심 국정 과제인 것으로 조사됨.

4. 새해 필요한 친서민 정책 강화 분야

친서민 정책 강화 분야, '일자리 등 취업문제' 40.6%	
질 문 ▸	그간 대통령과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에 어떤 분야의 친서민 정책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등 취업문제	40.6%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24.0%
집값, 전세값 안정	12.4%
사교육 문제 해결	11.4%
육아 보육문제 해결	10.4%
모름/무응답	1.2%
합 계	100.0%

○ 새해에 강화될 필요가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일자리 등 취업문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24.0%)'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들이 좀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친서민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강화될 필요가 있는 정책은 '집값, 전세값 안정(12.4%)', '사교육 문제 해결(11.4%)', '육아 보육문제 해결(10.4%)'등의 순이었음.

○ '일자리 등 취업문제'는 ▶대구/경북(45.4%) ▶20 대(48.5%) ▶학생(52.5%) ▶301-400 만원 소득층(50.5%)에서 특히 높았음.

○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는 ▶대전/충청(27.6%), 광주/전라(34.3%), 부산/울산/경남(28.1%) ▶읍면지역(30.1%) ▶100 만원이하 소득층(28.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7.8%) ▶민주당 지지층(3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반, '찬성한다' 52.6%		
질 문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중입니다.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기업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높이겠다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찬성	16.2%	*찬성: 52.6%*
대체로 찬성	36.4%	
대체로 반대	20.8%	*반대: 36.5%*
매우 반대	15.7%	
모름/무응답	10.9%	-
합 계	100.0%	-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2.6%로 '반대한다(36.5%)'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52.6**	**36.5**		전체	**52.6**	**36.5**
지역별	서울	**55.6**	32.8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46.4	35.1
	인천/경기	**58.1**	34.9		자영업	54.7	39.7
	대전/충남/충북	54.4	37.7		블루칼라	**64.3**	19.0
	광주/전남/전북	33.7	**49.3**		화이트칼라	47.5	**42.7**
	대구/경북	**57.3**	26.7		가정주부	**56.0**	29.7
	부산/울산/경남	44.4	**43.7**		학생	44.1	**48.9**
	강원/제주	**64.2**	27.9		무직/기타	**56.6**	33.2
연령별	19-29세	44.9	**48.3**	소득별	100만원 이하	54.0	28.1
	30대	52.5	37.7		101-200만원	**57.3**	31.1
	40대	47.6	**41.4**		201-300만원	**56.2**	33.7
	50대	**58.4**	31.5		301-400만원	49.3	**44.7**
	60대이상	**62.3**	20.6		401만원 이상	50.4	**42.3**

○ '찬성한다'는 ▶인천/경기(58.1%), 대구/경북(57.3%) ▶50대(58.4%), 60대이상(62.3%) ▶블루칼라(64.3%), 주부(56.0%) ▶101-200만원 소득층(57.3%), 201-300만원 소득층(56.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2.9%) ▶한나라당 지지층(75.9%)에서 특히 높았음.

○ '반대한다'는 ▶광주/전라(49.3%) ▶20대(48.3%), 40대(41.4%) ▶자영업(39.7%), 화이트칼라(42.7%), 학생(48.9%) ▶401만원이상 소득층(42.3%) ▶대재이상(42.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4%) ▶민주당 지지층(5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TNS Korea Database 세종시 수정안 여론조사

	9/7 KSOI	10/6 경향	11/28 동아	본 조사
원안추진	36.0%	31.3%	35.8%	36.5%
수정추진	39.6%	47.4%	52.7%	52.6%

○ 세종시 관련 여론은 세종시 수정이 언급된 후, 전반적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 수정 추진 여론이 원안 추진 여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난 바 있음.

○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한 이후, 수정 추진 여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5-1. 세종시 수정 추진시 기대효과(n=수정안 찬성 526 명)

세종시 수정 추진시 기대효과, '수도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 29.0%	
질 문 ▸	(앞 문항 ①,②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기존의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여 추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도권 및 국가 경쟁력 강화	29.0%
충청권 발전 효과 증대	26.8%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	19.1%
국정의 효율성 증대	18.9%
모름/무응답	6.2%
합 계	100.0%

○ 세종시 수정 추진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수도권 및 국가 경쟁력이 강화(29.0%)'될 것에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u>세종시 원안 추진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수도 분할 논리가 일정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u>됨.

○ 그 다음으로는 '충청권 발전 효과 증대(26.8%)'를 꼽았으며,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수정 추진의 주요 이유로 든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19.1%)'와 '국정의 효율성 증대(18.9%)'을 꼽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수도권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꼽은 응답은 ▶여자(33.3%) ▶20 대(33.2%) ▶100 만원이하 소득층(36.4%), 301-400 만원 소득층(38.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7.1%)에서 특히 높았음.

○ '충청권 발전 효과 증대'를 꼽은 응답은 ▶대전/충청(53.0%) ▶101-200 만원 소득층(33.3%) ▶중졸이하(3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2. 세종시 수정 추진시 우려되는 점(n=수정안 반대 365 명)

세종시 수정 추진시 우려되는 점, '국정운영 신뢰 저하' 33.1%	
질 문▸	(앞 문항 ③,④ 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기존의 세종시 원안을 수정 추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 저하	33.1%
국토 균형 발전 저해	29.7%
국론 분열과 갈등	24.0%
충청권 발전 효과 약화	8.1%
모름/무응답	5.1%
합 계	100.0%

○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이 수정 추진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저하(33.1%)'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토 균형 발전 저해(29.7%)'와 '국론 분열과 갈등(24.0%)'을 꼽은 응답도 일정 수준 나타남.

○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 저하'를 꼽은 응답은 주로 정부 여당 지지층인 ▶부산/울산/경남(50.6%) ▶자영업(38.8%) ▶한나라당 지지층(39.8%)에서 특히 높아, <u>정부 여당 지지층 중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수정안 자체에 대한 내용적 반대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 파기라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반대</u>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토 균형 발전 저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33.2%) ▶남자(34.2%) ▶30대(38.2%) ▶화이트칼라(38.5%) ▶401 만원이상 소득층(41.2%) ▶대재이상(33.7%) ▶민주당 지지층(3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u>개혁 성향층은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원안의 대의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u>됨.

○ '국론 분열과 갈등'이라는 응답은 ▶101-200 만원 소득층(39.2%) ▶고졸(2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4 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 평가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 평가, '재검토해야' 55.2%	
질 문 ▸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38.4%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55.2%
모름/무응답	6.4%
합 계	100.0%

○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5.5%로 나타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38.4%)'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전체		**38.4**	**55.2**	전체		**38.4**	**55.2**
지역별	서울	36.9	56.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46.6**	45.9
	인천/경기	41.6	51.8		자영업	**44.9**	49.5
	대전/충남/충북	**44.2**	52.7		블루칼라	37.4	58.1
	광주/전남/전북	17.8	**68.6**		화이트칼라	32.2	**62.7**
	대구/경북	**46.0**	47.7		가정주부	37.5	52.2
	부산/울산/경남	36.6	**58.9**		학생	34.1	**63.2**
	강원/제주	**51.0**	49.0		무직/기타	**45.5**	49.2
연령별	19-29세	30.3	**67.1**	소득별	100만원 이하	**45.2**	44.1
	30대	32.2	**60.5**		101-200만원	39.4	53.0
	40대	28.7	**64.6**		201-300만원	37.5	57.1
	50대	**50.8**	43.6		301-400만원	29.8	**69.1**
	60대이상	**55.4**	34.4		401만원 이상	36.9	56.7

○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인천/경기(41.6%), 대전/충청(44.2%), 대구/경북(46.0%) ▶남자(43.4%) ▶50대(50.8%), 60대이상(55.4%) ▶농림/어업(46.6%), 자영업(44.9%) ▶100만원이하 소득층(45.2%) ▶중졸이하(46.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1.8%) ▶한나라당 지지층(6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광주/전라(68.6%), 부산/울산/경남(58.9%) ▶여자(58.6%) ▶20대(67.1%), 30대(60.5%), 40대(64.6%) ▶화이트칼라(62.7%), 학생(63.2%) ▶301-400만원 소득층(69.1%) ▶대재이상(60.7%)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4.7%) ▶민주당 지지층(75.5%)에서 특히 높았음.

TNS Korea Database 4대강 살리기 사업 여론조사

	01-13 문화_R&R	03-28 동아_KRC	12-08 국민_동서	본 조사
찬성	37.1%	46.7%	43.6%	38.4%
반대	51.6%	49.7%	48.4%	55.2%

○ 4대강 살리기 사업 여론은 그간 사업 반대 여론이 사업 찬성 여론보다 우세한 형국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 같은 여론은 지난 11월 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 언급 이후에도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바 있음.

○ 특히, 최근 새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규모가 여야가 대립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6-1. 4 대강 살리기 기대효과 (n=사업 추진 384 명)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대효과, '강 정비 효과' 36.1%	
질 문 ▸	(앞 문항 ①번 응답자에게만) 4 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예방 등 강 정비 효과	36.1%
녹색 생태 환경 조성	31.0%
사회 전반의 고용 확대	16.9%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15.3%
모름/무응답	0.7%
합 계	100.0%

○ 4 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4 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등 강 정비 효과(36.1%)'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거 청계천의 사례와 같은 '녹색 생태 환경 조성(31.0%)'을 두번째로 높게 꼽았음.

○ 한편, '사회 전반의 고용 확대(16.9%)'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15.3%)'을 꼽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홍수 예방 등 강 정비 효과'를 꼽은 응답은 ▶읍면 지역(41.9%) ▶50 대(46.8%), 60 대이상(48.7%) ▶자영업(45.7%) ▶100 만원이하 소득층(54.0%) ▶중졸이하(51.8%) ▶한나라당 지지층(41.3%)에서 특히 높았음.

○ '녹색 생태 환경 조성'이라는 응답은 ▶40 대(3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 전반의 고용 확대'라는 응답은 ▶서울(20.4%) ▶20 대(36.2%) ▶대도시(22.8%) ▶화이트칼라(21.5%) ▶201-300 만원 소득층(22.5%) ▶대재이상(2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2. 4 대강 살리기 추진시 우려되는 점(n=사업 재검토 552 명)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우려되는 점, '막대한 예산 투입' 39.7%	
질 문 ▸	(앞 문항 ②번 응답자에게만)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 투입	39.7%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36.4%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	9.5%
주변 부동산 투기 성행	8.7%
국론 분열과 갈등	4.7%
모름/무응답	1.0%
합 계	100.0%

○ 4 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4 대강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39.7%)'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 오염(36.4%)'에 대한 걱정이 높았음.

○ **최근 야당이 걱정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9.5%)'될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막대한 국가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는 ▶인천/경기(45.1%), 대구/경북(49.1%) ▶여자(44.3%) ▶60 대이상(51.7%) ▶중소도시(46.8%) ▶주부(47.1%) ▶401 만원이상 소득층(46.4%) ▶고졸(45.7%) ▶민주당 지지층(44.7%)에서 특히 높았음.

○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는 ▶서울(43.1%), 광주/전라(45.2%), 부산/울산/경남(39.8%) ▶30 대(39.8%), 50 대(45.5%) ▶읍면지역(50.5%) ▶100 만원이하 소득층(47.2%), 201-300 만원 소득층(4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 선호하는 외고 개편 방안

선호하는 외고 개편 방안, '외고는 유지하되, 입시방법 바꿔야' 42.1%	
질 문 ▸	최근 사교육 근절 방안과 관련해 외고 개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외고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14.1%
외고를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해야 한다	19.7%
외고 제도는 유지하되 외고 입시 방법을 바꿔야 한다	42.1%
외고 제도와 외고 입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3.0%
모름/무응답	11.1%
합 계	100.0%

○ 외고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외고 제도는 유지하되, 외고 입시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2.1%로 가장 높았음.

○ 한편, '외고를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9.7%였으며,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고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4.1%, 13.0%로 엇비슷하게 나타남.

○ '외고 제도는 유지하되, 외고 입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인천/경기(55.1%), 대전/충청(46.3%) ▶20 대(48.8%), 30 대(49.9%), 40 대(46.6%) ▶중소도시(49.8%) ▶화이트칼라(52.7%) ▶201-300 만원 소득층(47.3%), 401 만원 이상 소득층(47.2%) ▶대재이상(47.2%)에서 특히 높았음.

TNS Korea Database 외고 개선 방안 여론조사

	외고 유지하되 학생선발권 제한	외고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	현행대로 유지해야	모름/무응답
11.8 국민-동서	43.1%	27.4%	14.0%	13.5%

○ 지난 11월 8일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외고 유지하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야'라는 여론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어, 외고의 틀은 유지하면서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 평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 '바른 방향이나 성과는 미흡할 것' 50.1%	
질 문 ▶	정부는 밤 10 시 이후 학원 야간 수업을 금지하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을 줄이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바른 방향이며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4.8%
올바른 방향이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으로 본다	50.1%
방향도 잘못되었으며 성과도 미흡할 것으로 본다	22.0%
모름/무응답	3.1%
합 계	100.0%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 2 중 1 명(50.1%)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한 가운데, '올바른 방향이며,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24.8%)'과 '방향도 잘못되었으며, 성과도 미흡할 것(22.0%)'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남.

○ <u>그간 교육개혁이 좌초되었던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로 교육 개혁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u>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올바른 방향, 성과가 있을것	올바른 방향이나 성과는 미흡할것	방향도 잘못, 성과도 미흡할것			올바른 방향, 성과가 있을것	올바른 방향이나 성과는 미흡할것	방향도 잘못, 성과도 미흡할것
전체		**24.8**	**50.1**	**22.0**	전체		**24.8**	**50.1**	**22.0**
지역별	서울	21.5	**55.7**	21.2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1	32.4	18.0
	인천/경기	22.4	52.8	23.6		자영업	25.1	53.4	20.7
	대전/충남/충북	**33.2**	39.0	26.0		블루칼라	**29.4**	42.4	22.6
	광주/전남/전북	18.7	39.4	**31.2**		화이트칼라	14.0	**60.4**	24.0
	대구/경북	**31.2**	49.4	14.7		가정주부	**28.6**	46.9	20.2
	부산/울산/경남	27.0	52.8	18.5		학생	13.5	**59.3**	**27.2**
	강원/제주	26.9	48.6	14.8		무직/기타	**45.5**	32.8	19.4
연령별	19-29세	11.3	**59.3**	**29.1**	소득별	100만원 이하	**43.8**	34.3	13.2
	30대	12.2	**59.6**	25.9		101-200만원	**28.2**	50.2	17.3
	40대	17.5	**55.5**	26.0		201-300만원	21.9	52.5	23.6
	50대	**33.8**	45.8	17.3		301-400만원	17.0	**62.4**	20.6
	60대이상	**54.9**	26.5	9.0		401만원 이상	17.8	52.3	**29.7**

○ '올바른 방향 이지만 성과는 미흡할것'은 ▶서울(55.7%) ▶여자(53.4%) ▶20대(59.3%), 30대(59.6%), 40대(55.5%) ▶대도시(54.1%) ▶자영업(53.4%), 화이트칼라(60.4%), 학생(59.3%) ▶대재이상(56.3%) ▶민주당 지지층(59.0%)에서 특히 높았음.

9. 지지하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하는 차기 대선 후보, '박근혜' 18.3%		
질 문 ▸	여야 구분 없이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선생님께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한 명 만 말씀해 주세요.	
	N(명)	%
박근혜	183	18.3%
정몽준	44	4.4%
유시민	25	2.5%
이회창	24	2.4%
오세훈	13	1.3%
고건	10	1.0%
문국현	10	1.0%
정동영	9	0.9%
손학규	9	0.9%
정운찬	8	0.8%
한명숙	7	0.7%
노회찬	5	0.5%
정세균	3	0.3%
김문수	2	0.2%
반기문	1	0.1%
기타	14	1.4%
없다/모르겠다	633	63.3%

○ 지지하는 차기 대선후보로는 '박근혜(18.3%)'를 꼽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몽준(4.4%)', '유시민(2.5%)', '이회창(2.4%)' 등의 순임.

○ 한편,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이 63.3%로 상당수의 국민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아직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를 꼽은 응답은 ▶대전/충청(24.7%), 대구/경북(26.2%), 부산/울산/경남(23.5%) ▶남자(21.4%) ▶50 대(28.8%), 60 대이상(23.7%) ▶자영업(30.2%) ▶100 만원이하 소득층(23.0%) ▶고졸(22.3%) ▶한나라당 지지층(25.4%)에서 특히 높았음.

10. 소득 3 만 달러 달성 위한 경제 정책 변화 방향(복수응답)

경제정책 변화 방향, '청년실업대책 강화' 47.7%	
질 문 ▸	소득 3 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청년실업대책 강화	47.7%
사회 양극화의 극복	34.5%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24.6%
창의적 지식산업 영역의 개발	23.4%
노사 문화 개혁	20.0%
기득권 층의 이기주의 극복	19.8%
과감한 규제완화	14.5%
기타	0.4%

○ 소득 3 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년실업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 양극화의 극복'이 34.5%로 두번째로 많아, **기업정책, 규제정책과 같은 거시적 정책 주문 보다는 주로 피부에 체감되는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문이 높았음.**

○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지식산업 영역의 개발'이 각각 24.6%, 23.4%로 나타났으며, '과감한 규제완화'라는 응답은 14.5%로 가장 낮았음.

○ '청년실업대책 강화'는 ▶대구/경북(53.3%) ▶여자(55.8%) ▶20 대(65.2%) ▶읍면지역(53.0%) ▶주부(54.1%), 학생(70.9%) ▶100 만원이하 소득층(52.0%), 101-200 만원 소득층(53.0%) ▶중졸이하(54.3%), 고졸(51.4%)에서 특히 높았음.

○ '사회 양극화의 극복'은 ▶광주/전라(40.7%), 부산/울산/경남(42.0%) ▶농림/어업(42.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1. 경제발전 최대 위협요인(복수응답)

경제발전 최대 위협요인, '낙후된 정치' 34.4%	
질 문 ▸	현재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낙후된 정치	34.4%
후진적인 노사관계	26.4%
과도한 사교육비	25.3%
저출산 고령화	24.0%
사회 양극화	22.5%
글로벌 경기침체	16.6%
과도한 정부 규제	14.3%
세계 금융환경 불안	13.5%
중국의 추격	7.5%
기타	0.2%

○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요인에 대해 '낙후된 정치'를 꼽은 응답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후진적인 노사관계'라는 응답이 26.4%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u>경제발전의 위협요인을 여야관계나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 내부적 갈등 문제에서 찾는 응답이 많았음.</u>

○ '과도한 사교육비', '저출산 고령화'등 이 각각 25.3%, 24.0%로 그 다음 순이었음.

○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응답은 16.6%, '세계 금융환경 불안'은 13.5%, '중국의 추격'은 7.5%로 외부에서 위협요인을 찾는 응답자는 소수였음.

○ '낙후된 정치'는 ▶대구/경북(43.3%) ▶남자(39.9%) ▶40 대(38.9%) ▶화이트칼라(42.5%) ▶301-400 만원 소득층(48.0%) ▶대재이상(38.1%)에서 특히 높았음.

○ '후진적인 노사관계는 ▶인천/경기(30.4%) ▶50 대(35.7%) ▶자영업(35.5%) ▶401 만원이상 소득층(32.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4.4%) ▶한나라당 지지층(3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2. 일류국가 구현 위한 사회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사회분야 최우선 과제, '교육개혁' 47.4%	
질 문 ▸	일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개혁	47.4%
저소득.장애인.소외계층을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	44.1%
미래의 경제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	41.5%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사회' 구현	28.3%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범국민 환경운동 전개	23.5%

○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분야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꼽은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음.

○ '사회안전망 구축(44.1%)'과 '저출산 문제 극복(41.5%)' 역시 40% 응답률을 보여 시급한 과제들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안전한 사회 구현'과 '범국민 환경운동 전개'는 각각 28.3%, 23.5%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교육개혁'은 ▶대구/경북(54.2%) ▶30 대(54.9%) ▶201-300 만원 소득층(52.7%)에서 특히 높았음.

○ '사회안전망 구축'은 ▶서울(55.3%) ▶남자(49.0%) ▶20 대(52.2%), 40 대(52.2%) ▶자영업(49.8%), 화이트칼라(53.3%), 학생(50.4%) ▶401 만원이상 소득층(52.4%) ▶대재이상(50.7%)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2.0%) ▶민주당 지지층(4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저출산 문제 극복'은 ▶인천/경기(44.6%) ▶50 대(50.9%) ▶블루칼라(50.4%) ▶한나라당 지지층(4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3.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최우선 대책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최우선 대책, '직장내 육아시설 확충' 40.4%	
질 문 ▸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래에 인구위기는 물론이고 경제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맞벌이 부부 위한 직장내 육아시설 확충	40.4%
사교육.주거비 줄이는 사회적 기반 구축	33.1%
다자녀 가구 우대를 통한 출산 장려	17.5%
무분별한 낙태 줄이기와 미혼모 지원	6.3%
모름/무응답	2.7%
합 계	100.0%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4%가 '맞벌이 부부 위한 직장내 육아시설 확충'을 꼽았으며, 33.1%는 '사교육, 주거비 줄이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라고 응답해, <u>아이를 출산해 기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육아 시설 및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u>

○ '다자녀 가구 우대를 통한 출산 장려'는 17.5%, '무분별한 낙태 줄이기와 미혼모 지원'은 6.3%로 소수에 그쳤음.

○ '육아시설 확충'은 ▶여자(46.4%) ▶50 대(48.7%), 60 대이상(46.7%) ▶읍면지역(43.7%) ▶농림/어업(49.7%), 주부(46.0%) ▶100 만원이하 소득층(47.7%) ▶중졸이하(45.0%)에서 특히 높았음.

○ '사회적 기반 구축'은 ▶부산/울산/경남(36.8%) ▶남자(37.3%) ▶40 대(45.8%) ▶화이트칼라(38.9%) ▶301-400 만원 소득층(40.0%), 401 만원이상 소득층(41.6%) ▶대재이상(36.7%)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0.7%) ▶민주당 지지층(3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4. 일류국가 구현 위한 국가적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국가적 최우선 과제, '국가청렴도 제고' 53.3%	
질 문 ▸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국가적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부정부패 근절로 국가청렴도 제고	53.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38.1%
법 집행과 정부정책의 신뢰 증대	36.0%
한반도 안보 불안 해소	19.8%
남녀, 장애인, 외국인 평등한 대우	15.8%
관광.문화.예술 진흥	11.6%
국제 원조확대와 기부문화 정착	10.4%

○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확보돼야 할 최우선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가 청렴도 제고'를 꼽은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음.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1%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법 집행과 정부정책의 신뢰 증대'는 36.0%로 세번째로 높게 나타남.

○ 이밖에 안보 불안 해소(19.8%)', '남녀, 장애인, 외국인 평등한 대우(15.8%)', '관광, 문화, 예술 진흥(11.6%)'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청렴도 제고'는 ▶대구/경북(60.0%) ▶자영업(58.4%) ▶201-300 만원 소득층(57.3%) ▶고졸(59.1%)에서 특히 높았음.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부산/울산/경남(45.8%) ▶20 대(46.7%) ▶중소도시(42.3%) ▶학생(46.8%) ▶한나라당 지지층(4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법 집행과 정부정책의 신뢰 증대'는 ▶서울(43.3%) ▶남자(40.2%) ▶30 대(45.7%), 40 대(42.8%) ▶블루칼라(43.1%), 화이트칼라(42.3%) ▶401 만원이상 소득층(41.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5. 일류국가 구현 위한 정치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정치분야 최우선 과제, '권력형 부패구조 청산' 50.7 %	
질 문 ▸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정치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할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권력형 부패구조 청산	50.7%
대화와 타협이 중시되는 의회문화 수립	45.7%
정치인 세대교체나 물갈이	31.2%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구현	24.7%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개선	14.1%
선거 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13.6%

○ 앞서 국가적 최우선 과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분야 최우선 과제 역시 부정부패와 관련된 '권력형 부패구조 청산'을 꼽은 응답자가 50.7%로 가장 많았음.

○ '대화와 타협이 중시되는 의회문화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5.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정치인 세대교체나 물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1.2%로 세번째로 높게 나타남.

○ 올 하반기 정치개혁의 이슈로 등장한 '5 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개선'과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은 각각 14.1%, 13.6%로 소수에 그쳤음.

○ 일류국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에 대한 변화보다는 지도층 도덕성 강화나 대화의 타협의 정치 등 정치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 '권력형 부패구조 청산'은 ▶부산/울산/경남(56.0%) ▶20 대(56.7%) ▶읍면지역(55.2%) ▶자영업(56.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1%)에서 특히 높았음.

○ '대화와 타협이 중시되는 의회문화 수립'은 ▶서울(50.5%), 대전/충청(54.9%) ▶대도시(49.5%) ▶주부(48.8%), 학생(54.2%) ▶대재이상(5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6. 일류국가 구현 위한 외교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외교분야 최우선 과제, '비즈니스 외교 강화' 50.3%	
질 문 ▸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외교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할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수출지원, 외자유치 등 비즈니스 외교 강화	50.3%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개선	37.6%
유엔 등 국제 기구 영향력 확대	28.0%
국제사회 대북정책 주도적 역할 확보	24.5%
국제적 행사 유치. 주관	19.2%
국제 원조. 해외봉사활동 확대	17.5%

○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외교분야 최우선 과제에 대해 최근 UAE 원전 수주를 반영하듯 '수출지원, 외자유치 등 비즈니스 외교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50.3%로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외교분야에 접근하는 시각이 많았음.

○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개선'이 37.6%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유엔 등 국제 기구 영향력 확대'가 28.0%로 세번째로 높았음.

○ '국제적 행사 유치, 주관'과 '국제원조, 해외봉사활동 확대'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19.2%, 17.5%로 적었음.

○ '비즈니스 외교 강화'는 ▶대전/충청(65.9%) ▶50 대(55.9%) ▶401 만원이상 소득층(57.7%) ▶고졸(58.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4.1%) ▶한나라당 지지층(58.2%)에서 특히 높았음.

○ '남북 관계 개선'은 ▶서울(43.1%) ▶블루칼라(47.8%), 화이트칼라(42.4%) ▶100 만원이하 소득층(42.3%) ▶중졸이하(41.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